



# 2001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좌 승 희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우** 리 경제는 97년말 IMF위기 이후 어려움 속에서 적절히 거시경제정책 대응과 기업·금융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99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경기반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유가상승, 반도체가격의 하락, 주식시장의 침체 등과 더불어 IMF사태이후 지속되어온 금융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2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1년도 경제를 전망하고 거시정책 및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국내 경제전망

세계경제 예측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01년 EU와 일본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0년의 4%대보다 다소 낮은 3~4%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성장률도 다소 낮아져 우리의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생산증가세가 내수 및 수출증가세 둔화로 최근 주춤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경기하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에는 3%대까지 떨어졌다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되어 전체적으로 연간 4~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비의 경우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3~4%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정보통신분야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세의 둔화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주택경기의 침체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참조>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자리 수 증가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는 2000년과 비슷한 100억불 정도로 전망된다.

〈200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1999	2000 (전망치)	2001(전망치)				
				1/4	2/4	3/4	4/4	년간
경제성장률	%	10.7	9.1	3.5	3.9	4.5	5.9	4.5
민간소비	%	10.4	7.7	2.9	3.3	4.2	5.3	4.0
고정투자	%	5.1	13.4	-5.1	-2.3	-0.8	2.1	-1.4
설비투자	%	38.3	37.9	-6.5	-1.5	0.5	2.6	-1.2
건설투자	%	-10.4	-4.2	-3.2	-2.9	-2.1	1.7	-1.5
소비자물가	%	0.8	2.3	3.2	3.0	3.0	2.9	3.0
경상수지	억달러	244.8	97.1	10.3	18.9	33.9	28.4	91.4
수출액 (증가율)	억달러 %	1451.5 (9.9)	1772.6 (22.1)	417.1 (0.5)	450.6 (2.2)	468.9 (3.2)	494.3 (6.9)	1830.9 (3.3)
수입액 (증가율)	억달러 %	1167.9 (29.1)	1604.6 (37.4)	390.0 (0.0)	406.9 (-3.3)	416.6 (4.2)	439.1 (4.4)	1652.6 (3.0)
실업률	%	6.3	4.3	4.7	4.6	4.5	4.4	4.5
원화 환율(기말)	원/달러	1138.0	1265.0	1220.0	1200.0	1180.0	1170.0	1170.0
회사채 수익률(평균)	%	8.9	9.4	8.7	8.7	9.1	9.3	8.9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산품가격의 상승, 공공요금의 인상, 에너지세제개편 등으로 지난 해보다 높은 3~4%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경기상승세의 지속으로 그 동안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여 왔으나 향후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4~5%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금융시장동향과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처럼 구조조정이 부진할 경우 신용경색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경제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 속에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장원리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회

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 2. 정책과제

향후 우리경제의 진로는 무엇보다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경색은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맞는 구조조정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거시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우선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저금리 유동성 공급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의 경험이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은 경기의 급랭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우선 경제주체를 집단적으로 선진화시키거나 집단적으로 퇴출시키는 집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경제의 냉엄한 원리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경제주체들간에 차별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정책의 운용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하는 금융기관과 못하는 금융기관,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함으로 해서 우량·비우량 금융기관 및 기업을 식별하

지 못하게 되어 금융경색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200% 부채비율이라든가 8% BIS 비율과 같은 경직된 기준에 따라 집단적으로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선진화시키고자 하거나 역으로 경직된 기준에 의해 모든 경제주체들을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집단적으로 퇴출시키고자 하는 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구조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경제주체에게는 응분의 보상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못하는 경제주체들만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주체간의 철저한 차별화에 기초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금융기관과 못하는 금융기관이 차별화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잘하는 금융기관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하는 금융기관은 그들의 전략에 따라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못하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회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청산할 것인가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재벌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는 반 재벌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재벌 혹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잘하는 기업이 있고 못하는 기업이 있다. IMF사태 이후 지난 3년 동안 적절하게 대응해온 그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재벌을 동시에 선진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갈 수 있도록 활로를 터주고 못하는 기업은 엄격한 시장원칙에 따라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내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경색도 풀리게 될 것이다.

### 3)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중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변신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다운사이징, 기업간의 M&A, 최악의 경우는 못하는 기업의 퇴출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 한편에서는 반드시 실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실업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어렵게 된다.

노조의 반대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정리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다운사이징, 기업간 M&A, 부실기업의 퇴출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에서는 구조조정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사실상 낭비와 다름없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에 따른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는 IMF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 졌고 지난 해의 경우 실업자 지원을 위해 2조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불충분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다운사이징, M&A 등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